

95 대학입시, 무엇을 눈여겨 보아야 하나

한 준 상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처장

1995학년도 대학입시는 작년과 비슷하게 내신,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본'고사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작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입시운영상의 문제들을 교육부가 보완한 입시방안이기에는 이번 입시계획이 학부형에게나 일선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시기본계획을 각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부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게 마련이다. 이번의 입시 정책을 대학이 악용해도, 그 책임은 끝내 교육부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라도 불식되어야 한다.

1. 대학입시 기본구조와 수능시험 활용방안 모색

95학년도 대학입시는 ① 내신성적 40% 이상,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③ 대학별 '본'고사 성적을 대학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반영하되, 학생선발만큼은 총점의 성적순'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학생선발을 ① 고교내신성적만으로 하든(40% 이상 필수 반영), 아니면 ② 내신성적 40% 이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합산점으로 하든, 혹은 ③ 내신성적 40% 이상 + 대학별고사 성적의 합산으로 하든, 아니면 ④ 내신성적 40% 이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대학별고사 성적으로 하든 그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택하되, 선발만큼은 성적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입시제도에 동원된 각각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고교내신 성적: 고교에서 교육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가르친 교사들이 재학기간 동안 계속 평가하여, 상급학교에 진학 평가 자료로 제공한 성적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발전된 학력고사' 성적

③ 대학별고사: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시행하는 고사

결국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첫째로 한 학생이 고교시절 동안 수십 번 치렀던 시험성적의 결과물인 학업성취도, 둘째로 1년에 1번 치르는 평가원의 학력고사 성적, 셋째로 1년에 한 번 치르는 대학별 대학입학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입시제도에 쓰여진 용어는 복잡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교생들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시험과 시험성적 순'에 따라 대학진학이 결정되도록 되어있다. 이번의 대학입시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각 대학은 고교내신 성적을 40% 이상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향한 교육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고교내신성적을 40% 이상 입시점수에 반영하라는 말은 학부모에게 고교교육을 믿으라는 말이며, 동시에 고교는 교육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단독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절하 형태의 의미부여'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취해왔던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수능시험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또다른 혁신적인 조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부가 뚝뚝하게 밝힌 대로 '학력고사'이지, 그 이상의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부 교수들이 내세웠

던 무슨 유별난 적성시험이 아니라, 단순한, 그렇지만 여러 해 전에 실시해 보았던 학력고사 문제보다는 출제방식이 훨씬 개선된 학력고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교교육만 잘 받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굳이 대학입시의 선발기준 도구로 채택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엿보게 만든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입시의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징후를 읽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교과활동을 실행해야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각급 학교가 행한 사고력 중심의 수업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학교교실에서 행해온 학교수업은 판서일변도, 암기중심교육이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따라서 고교내신이 정착되면 각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력고사의 성격을 훨씬 벗어나지 않는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대학진학을 위한 하나의 대학응시자격 제한용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지난 93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했던 주요 대학의 경우, 대학별고사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과 내신 간의 상관관계는 낮았으나, 내신과 대학별고사 간의 상관관계는 수능과 내신 간의 상관관계보다는 의미있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수학능력시험 없이도,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대학이 본고사만 잘 내면, 각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결국 수능시험을 교육부가 강요할 경우, 각 대학은 수능시험 성적을, 지난 번 포항공대가 활용했듯이, 응시자격전형자료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게다가 대학입시의 자율화가 마치 대학별고사 실시로 곡해된 것처럼 각 대학이 일제히 대학별고사 실시를 선호할 경우,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학생들에게 내신과 대학별고사에 이은 또다른 시험부담이나 주는 고사로 이해되기만 할 것이다.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제환용 방안이 별도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험이 스스로 더욱더 발전되어 단순한 학력고사의 성격을 벗어날 경우, 대학에서 이 시험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다.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내신성적 산출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명은 이 시험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학 수학능력을 예측해 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정받느냐의 자체능력에 달려 있다. 이 시험이 미국 ETS의 SAT처럼 각 대학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수 있는지 어떤지에 따라 수능시험의 장래가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차지원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가 일선에서 제기되자 교육부는 금년부터 수능시험의 성격을 새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의 수능시험에서는 언어와 외국어(영어)영역을 뺀, 수리·탐구 I(수학)과 탐구 II(사회 및 과학 탐구)의 두 영역에 계열별 출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간의 성적불균형 현상이 나타난 데다, 계열 공통출제 때문에 전공계열에서의 학습 성취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수리탐구 I 과 외국어 영역의 문항당 배점 비율도 3단계로 세분화돼 수능시험 전 영역에 차등배점제가 실시된다. 수리탐구 I 영역(94년 2점)은 1, 1.5, 2점으로, 외국어 영역(0.8점)은 0.

6, 0.8, 1점으로 문항별 배점 비율이 달라지며 언어와 수리탐구 II 영역은 0.8, 1, 1.2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차등배점제의 확대를 통해 동점자를 줄이고 수능시험의 변별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리탐구 I 영역의 문항수가 2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이 영역의 시험시간도 7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문항수는 1백90문항에서 2백문항, 시험시간은 3백40분에서 3백60분이 됐다. 그러나 총점은 2백점으로 지난해와 같다. 출제는 수리탐구 영역 I, II를 합쳐 점수기준으로 75%를 공통범위에서, 25%는 계열별로 구분해서 하게 되며 영역별 평균점수가 50~60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의 출제를 피하는 등 난이도를 조정키로 했다. 수리탐구 II 영역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 비율을 인문계와 예체능계는 6대4로 하고 자연계는 4대6으로 정해 고교교육과정의 과목별 기준단위비율을 반영토록 했다. 특히 9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 달 후 발표되는 개인성적통지서에 각 교시별 점수 및 총점과 함께 응시계열 그리고 계열별 백분위점수가 표시된다. 응시계열 표시는 각 대학이 비동일계열지원자에 대한 감점제를 실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계열별 백분위점수는 수험생의 성적이 전국의 몇 %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 영역별 가중치 적용 등에서 수능시험 성적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들은 영역별 성적과 대학별 전형특성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골라 수능시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의 계열별 출제에 따라 대학진학 예정 계열별로 수능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결국 대학 지원 때도 수능시험 응시계열과 동일한 계열에 지원해야만 하기에, 계열을 옛날처럼 막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결국 94학년도 입시에서처럼 교차지원시 감점제를 적용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어 대학

은 교차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3. 대학별 '본'고사 채택과 되살아날 과열과외

1995학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르는 대학은 142개 대학이다. 이 중 47개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치를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기본골격으로 삼고, 어찌면 각 대학교수들의 출제능력을 심사하게 되는 대학별고사 실시를 강행할 것이다. 대학별고사 성적이 학생선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학별고사가 '본'고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든지, 아니면 '주변'역할을 하게 될지는 서로 다르게 된다. 대학별고사가 이번 입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이론적으로는 최고 60%로부터 최하 0%가 되나, 실제 채택 반영률은 10%로부터 40%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위권 대학인 서울의 D 대학의 입시 경우, 내신 40% + 수능 50% + 대학교사 10%로 예정하고 있어, 이 경우 '대학별고사'는 '주변'고사의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본고사 점수가 입학당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대학별고사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주게 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S 대학이나 K 대학은 내신 40% + 수능 20% + 대학교사 40%를 채택하고 있어, 이 경우 대학교사 성적은 입학당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 경우, 수능시험 성적은 입학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고교생들은 수능 준비보다는 대학별고사 준비에 더 큰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는 그야말로 입시당락을 갈라주는 '본'고사의 성격을 갖게 되어, 학생들에게 엄청난 시험 압력과 과열과외를 부추기게 만든다. 이번 대학

별고사 채택의 과정을 눈여겨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별고사에 선발의 무게중심을 두어 대학별고사를 입시에 있어서 '본'고사의 비중을 높이려는 대학들은 주로 세칭 1.5류 대학들이 속한 대학이다. 이들은 대학의 위신이 대학별고사 실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더욱 더 대학별고사를 고집하고 있다. 대학별고사가 이번 입시에서 본고사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주변고사의 기능을 발휘하든 간에 관계없이, 대학들이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를 채택하는 추세를 그대로 보고있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할 일이 못된다. 이미 대학별고사 실시에 대해 교장단이 강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지만 마이동풍적인 것 같다. 사실 국·영·수 중심의 대학본고사 실시는 70년대 이전에 보았던 망국과외를 재연시킬 것이 확실하며, 이로 부터 서민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아 연간 약 2~3조 원이 단순히 입시준비 과외비로 탕진된다는 것은 교육정책적으로 딱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별고사 준비 때문에 고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5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면서 고교내신제의 정착을 유도한 교육부의 중등교육의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입시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끝내는 교육부가 떠맡게 되는 형국으로 나갈 것 같다. 따라서 이런 비판에 대비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대학입학 전형방법과 소극적인 교육기회의 평등화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학선발과 전형방법 중 중요한 것은 ① 특차모집전형, ② 일반모집전형, ③

특별전형방법이다. 특차모집전형이나 일반모집전형은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한 지원자수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전·후기 모집에 앞서 선발하거나 혹은 대학이 택한 전기 혹은 후기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95학년도에는 각 대학의 특차모집의 비율을 정원의 4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차 전형에 비해, 특별전형은 ① 특기자(예·체능계, 문학, 어학, 수학, 과학 특기자를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제3항에 따라 선발)와, ② 산업체 근무자(고교 졸업후 2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자를 야간학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선발), 마지막으로 ③ 외교관, 교포, 상사직원들의 자녀를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제4항에 따라 학년별 입학정원의 2% 이내, 학과정원의 10% 이내의 학생을 정원으로 대학이 자율적인 선발방법으로 뽑는 방법이다.

교육부가 특차모집 비율을 40% 정도로 확대한 것은 대학에게 대학입시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잘한 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차모집전형 대상자를 성적 우수자에게로만 국한시킨 것은 한국교육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취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미리부터 봉쇄한 것과 다름이 없다. 최근 일류 대학인 Y대학이 특차모집비율을 정원의 40%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5%를 농촌면단위에서 수학하는 내신성적 1등급자로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교육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아주 어려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말하자면 교사나 군인공무원 중 하사관, 하급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내신성적 1등급자에 한해 차별없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Y대가 요구한 특별전형에 대해 현행 교육법상 딱 들어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

어 허용하기 어려운 대신, 대입선발 인원의 '지역별 할당제'를 허용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런 입장은 교육기회 평등화에 관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보인다. 국가경쟁력이 뛰어난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 100대 대학 안에 드는 미국의 유명 대학은 능력은 있으나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특수계층의 일정수 학생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부유계층보다 차별적으로 더 우대하고 있다. Y대의 특별전형 실시와 이에 대한 교육부 정서 간의 차이와 관료주의에 대한 이해차이에 대한 사실상의 진위야 어떻든 간에, 언론이나 국민들은 Y대의 특별전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낸 바 있다. 언론에서는 오히려 외교관, 상사직원 및 교포자녀의 특례입학제도가 교육기회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위헌사항인지 어떤지를 제소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문제를 확대, 비화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학생선발 방법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복수지원제 실시와 본격화될 대학간의 서열화

95학년도 전기대학 신입생모집 선발기간은 1995년 1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3회에 걸친 복수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3일에 걸친 3회의 권장기간을 설정했다. 즉, 1월 9일(제1회), 1월 13일(제2회), 1월 17일(제3회)을 정했다. 입시일자가 다른 기간에는 복수지원이 허용되기에 한 학생이 전기 대학을 선택할 경우, 최고 3회까지 입시를 치를 수 있다. 수험생은 2개 대학 이상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1개 대학을 선택해서 등록해야 한다. 물론 2개 대학 이상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의사가 없는 대학에 등록포기각서를 해당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일 모두는 세칭 일류 대학에는 별 문제가 없는 일들이다. 왜냐하면 세칭 일류대는 입시일을 대체로 1월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1월 6일에 입시원서를 마감하고 곧이어 9일에 입시를 치르기에는 대학의 입시관리상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가 공무원의 인력이 많은 서울대이기도 하지만, 서울대가 입시일을 입시기간중 1회차인 1월 9일로 잡는 것 역시 벽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 대학이 17일을 입시일로 잡는다는 것은 체점문제 때문에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입시일을 17일로 잡았다면, 이것은 서울대가 교육부의 복수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자율성과 개혁을 예고해 주는 일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대의 성격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입시일 택일은 서울대학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세칭 일류 대학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입시 첫날인 1월 13일을 입시 날로 잡은 대학이 75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73.8%에 달한다. 세칭 1.5류 대학에 속하는 대학들 역시 1월 13일을 입시일일로 택했는데, 이들은 입시일을 잘못 택해 곤욕을 치렀던 포항공대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학이 입시일을 그 언저리로 잡든 그것은 일류대나 1.5류대 이상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

게는 큰 의의를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는 세칭 일류 대학과 그곳으로 편입해보려는 1.5류대학 때문에 더욱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해방 이후 50여 년을 거치면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 옛날에 잠시 명문대학으로 불리던 대학이 어느 틈엔가 1.5류대학으로 하락되고 있으며, 2류대학으로 혹은 3류대학으로 불리던 대학들이 어느 틈엔가 1.5류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승급과 하락에는 제단의 지원능력, 총장의 대학경영능력,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업적, 우수한 학생선발과 교육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나가는 대학의 총장일수록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우수학생 선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리가 없다. 일류 대학 수준에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시일 역시 일류 대학이 택한 그 날짜를 선택할 것이다. 결국 일류대학은 초기의 입시일을, 이·삼류대학은 후기의 입시일을 택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교육부가 제시한 3회의 입시일은 대학의 서열을 자연스럽게 갈라 주는 대학 서열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일류대학에로의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복수지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입시일만이라도 무작위로 결정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추첨을 통해서라도 주요 국립 대학들이 3회에 걸친 입시일에 균등히 배분되게 조종함으로써 사립 대학들에 '충격적'인 모범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